

'90 낙농육우산업 결산

김 인식
한국낙농육우협회 지도과장

농축산업 전반이 다 그러하듯이 이에
국내 문제에서 수입개방화라는
국제적과제까지 떠맡아야 하는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보면 유사 이래 최악의
농정사태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따라서 농축산업의 위축현상이
 본격화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1. 머리말

낙농육우산업에 있어 '90년도는 앞으로의 향방을
예고하는 불안하기 그지없는 한해였다고 본다.

농축산업 전반이 다 그러하듯이 이제 국내 문제에서
수입개방화라는 국제적과제까지 떠맡아야 하는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보면 유사 이래 최악의 농정
사태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따라서 농축
산업의 위축현상이 본격화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생각된다.

연초부터 소비부진으로 심각했던 분유체화문제는
하반기들어 우유 부족사태로 발전하였고, 당초 5만8
천톤의 쇠고기 수입 쿼타량을 정부 스스로 늘려 8만
톤으로 책정하는가하면 우루과이 농산물 협상으로
나라안이 온통 세미나다 토론회다하여 요란하였건만
제시된 대안이라고는 알맹이를 찾을 수 없는 대책이
었고, 오히려 생산비 인하를 위해 수년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건은 농림
수산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농발기금흡수 운운하는가
하면 마시수익금으로 축산진흥기금을 마련할 수있는
한국마사회마저 농심수산부에서 체육부소관으로 넘
겨주는 어처구니 없는 탁상행정이 연출되는 등 그야

그동안 축산업이 수출산업우위의 상공업 위주정책에 밀려 발전이 더디고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개방에 대응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선행되지 않는 한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

말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그동안 축산업이 수출산업우위의 상공업 위주정책에 밀려 발전이 더디고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개방에 대응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선행되지 않는 한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한다고 본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해를 뒤돌아보는 것이 단순한 사건의 나열보다는 앞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단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우유수급 불균형의 심각성

올해만큼 우유 수급문제를 근시안적으로 다루어 불균형현상을 심화시킨 예는 낙농사상 유례가 없을 것이다.

지난해 1만5천톤의 분유재고 이월로 유업체는 경영압박을 낙농가에게 전가시키게 되었고 이러한 사유업체의 입장은 사주들의 모임에서 결의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즉 유대의 지연, 유대의 현금대신 분유등 현품지급 혹은 어음지급, 그리고 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집유제한 혹은 집유거부현상이 지역별로 있었고, 따라서 우유를 길바닥에 쏟아 붓는 소동이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비치어 사회문제화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월 9일 13개 사유업체 사주들이 모여 유대의 분유지급과 집유제한조치 등의 일방적 조치를 하겠다는 결의를 보임으로써 낙농가들의 어려움은 가중되었고 비수기동안 피해는 계속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동안 집유를 하고 원유를 사들이는 유업체에서의 원유점사로 마찰의 소지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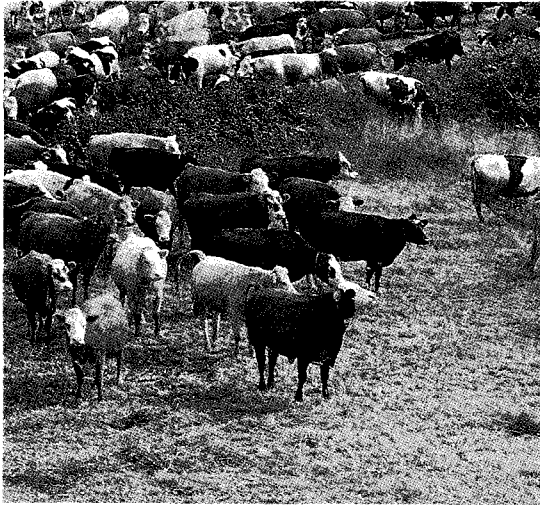
사에 있어서의 계량과 지방률에 대한 시비는 아예 낙농가들이 입박에 들어내지도 못하는 형편이었다. 우유가 남아도는 편에 집유차로 받아가 주는것만해도 고마운데 유지율이나 계량문제를 불평하다가 당할 불이익 때문에 도저히 입박에 꺼내기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지역 간담회 등에서 표현된 낙농가들의 솔직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업체와 낙농가간의 마찰분위기는 비성수기를 넘기고 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대부분의 사유업체에 납유하는 낙농가들이 7~8월경까지 분유등의 유대대신 지불현상은 계속되어 정상적인 원유 유통 질서가 무너지고 말았다. 업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원유 kg당 대개 3~5원씩 지불하던 유질개선 냉각비가 7~8월경에 거의 중단되었다.

물론 서울우유협동조합,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등 낙농가 스스로 경영하는 조합의 경우 낙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내는 반면 조합 경영진의 고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어려움속에서 정부는 2월에 우유수급안정대책을 제시하였는데 2~3월중 5천톤의 분유수매와 정부가 지원하는 대용유용 전지분유 공급을 당초 1천톤에서 2천톤으로 확대, 낙농가에 대한 원유대 지급자금 2백억원의 방출, 젖소도태를 실시하여 우유 소비수준에 생산을 맞추기 위한 11만2천두의 도태 및 정상우 3만두 도태, 그리고 낙농가에 분유 공급시 저가인 kg당 2천5백원에 할 것등이 주요골자였다.

그러나 분유5천톤 수매공약은 계속 이행되지 않아 분유재고가 있던 내내 유업체에서 낙농가에 대한 경영부담 전가 행위의 명분을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고



7월10일 낙농가들의 여의도광장에서 분유수매 공약 이행촉구등 낙농 육우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이행을 여론화하는 시위까지 연결되게 하였다.

분유재고로 낙농가들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입개방압력에 따른 불안감이 팽배해지자 낙농가 스스로 우유소비홍보등 자구책 마련에 솔선하게 되었다.

우유스티커제작으로 전국 다방과 농수산관련 행정관서, 단체등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하기 운동전개, 차량스티커 제작 배포, 우유로 손님접대하기운동, 그리고 전국 도심지에서의 우유소비 홍보 가두캠페인 등 낙농가의 참여속에 우유마시기 홍보운동을 경주하는가 하면 표어제작 배포, 사무실외벽에 우유마시기 구호 걸이등 한국낙농육우협회를 중심으로한 낙농가의 우유 홍보가 나름대로 뜨거웠다.

그런가하면 정작 소비홍보의 책임이 있는 유업체에서 소비홍보에 소극적이고 낙농가에 대한 경영부담 전가행위에 급급하다는 여론으로 유업체마다 분유지급등 현물을 유대 대신 지급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졌다. 심지어 이미 지급된 전지분유등을 농가들이 수거하여 유업체에 반납 항의하는 소동도 거의

빠짐없었고, 타유업체의 선례에 지레짐작하여 분유등을 지급하다 중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9월이 지나가도록 일부유업체는 전년도 집유수준을 낙농가에 제시하면서 집유제한과 생산제한을 중용하는 등 중반기 이후까지도 분유재고로 몸살을 앓았다.

대국민 여론환기와 우유의 우수성을 전달하기 위한 행사로 건국대 학생들의 서울 부산간 도보캠페인 행사가 있었고 서울시내 초중고교 양호교사와 학교 우유급식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우유 영양세미나가 한국낙농육우협회 주최로 개최되었고, 우유은행의 설립이 지역적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남는 우유로 직접적인 불이익과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낙농가의 의욕은 극도로 상실되었고 계속적인 생업이탈현상이 나타났다. 89년 12월현재 3만6천호였던 낙농가수가 올해 9월 3만3천호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85년말 4만3천호이래 1만호가 감소된 숫자이고 올해들어 3천여호의 이탈현상이다. 농촌노동력부재와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 옥수수등 사료작물의 장마일기로 인한 감량생산등도 복합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젖소두수는 자연적 증가추세에 맞추어 늘어나는 것이 정상임에도 지난 연말 51만5천두의 숫자에서 올 6월 49만5천두로 감소되는 역사상 초유의 사례가 발생하였고, 낙농의 어려움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표출시키고 있다.

한국소득수준에서 더이상 시유소비는 한계에 도달했다거나 앞으로는 과잉생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는니 하는 소극적 대응으로 생산조절을 유도하는 시책에서 더이상 전망을 생각할 수 없었던 많은 낙농가들이 도산하였고 젖소도태가 이루어져 정상적인 젖소 두수 증가마저 오히려 정지되어 버린 셈이다.

더욱이 정부는 젖소시장 출하정책을 실시, 절대두수의 감축을 통해 생산조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젖소출하장려금을 두당 15만씩 지급하였고 1천두

**농가들이 유대 대신 지급받은 전지분유를 수거하여 유업체에 반납하는 항의
소동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분노는 소비홍보의 책임이 있는 유업체에서 우유홍보에
지나치게 등한시한다는 불멘소리였다.**

가까운 숫자를 축첩을 통해 시장으로 유도해 냈다.
이와같이 상반기 내내 정부나 업계, 단체, 그리고
낙농가가 우유소비와 분유소비대책에 온갖 신경을
집중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원유수집은 4월이후부터 소비가 생
산을 알지르고 있었다. 다만 비수기까지의 재고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어려운 과제 때문에 중반기
이후까지 분유처리대책에 고심하였지만 재고 누계는
점차 줄어들었고 급기야 9월부터는 원유부족현상이
역력해지자 오히려 유업체가 앞장서서 분유수입론까
지 들고 나오는 현상에 다소 아연해진다. 우유수급정
책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치않도 바라볼
수 없는 당국이나 유업체의 태도에 빈축이 없지않다.

3. 단절적 우유 수급정책의 문제

분유체화로 어려움을 겪은 연유는 여러가지 복합
요인이 있으므로 짚아서 지적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지난해부터 거론된 이상구 건강론 여파, 원유가 인상
에 따른 제품가의 연쇄적 인상결과, 제반 경제의 위
축분위기에 따른 우유소비둔화, 그리고 파스퇴르 우
유의 진짜우유 논쟁에 따른 일반대중의 우유에 대한
불신풍조등이 재고체화의 주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분유적체로 유업체의 경영압박, 이로인한 낙농가
의 정상생업의 어려움과 위기감, 정부의 정책대안 제
시 요청등 관련당사자 모두가 이해하고 지혜를 모아
야 할 문제가 결과론적으로 오판의 소지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소비증가를 추정이 지나치게 낮게 잡혀있었
다.

농가들이 유대 대신 지급받은 전지분유를 수거하
여 유업체에 반납하는 항의 소동과정에서 가장 강력
한 분노는 소비홍보의 책임이 있는 유업체에서 우유
홍보에 지나치게 등한시한다는 불멘소리였다. 물론
신제품 요쿠르트 개발등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판로
확대로 만회되었다는 대답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적기
에 강한 홍보활동이 있었다면 농림수산부의 수급 계
획에도 분명한 가능성이 제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실제로 소비가 생산보다 앞선 4월이후 9월까지의
우유소비수준은 전년동기 대비 평균 19%의 증가를
보였다. 당초 농림수산부가 학교우유급식증가분, 가
축사료용 분유사용분등을 포함하여 10%증가를 예측
하고 순수 증가율은 5%정도로 내다본 것은 큰 차질
이었다.

물론 하반기들어 우유부족사태가 심각해진 것이
생산제한조치의 결과라고만 진단할 수 없는 점도 있
다. 소비자들의 우유가격 안정에 대해 타상품과의 상
대적인 부담 감소로 소비가 확대되고, 마시는 수도물
조차 오염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사회적 배경, 혹은
전반기까지 낙농의 어려움에 매스컴이 대대적인 동
정적 보도, 그리고 제반 물가폭등에도 불구하고 그나
마, 우유가격은 고정되어 있다는 점, 나아가 요쿠르
트등 신제품개발과 홍보등이 복합적으로 소비촉발을
가져오게 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더 큰 중요한
원인은 생산을 전년수준으로 억제해야만 된다는 정
책일변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로, 근원적인 우유소비확대책 혹은 생산안정 대책보다는 눈앞의 분유소진대책에만 급급하였다.

우유재고의 큰 이유중에 코코아분유 등 수입분유에 기인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코코아분유는 이미 수입자유화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품목분류 체계의 개선이 없이 낙농가의 힘을 배경으로 제과업체에 항의하는 정도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매일유업에서 수입시판한 밀루파등 분유제품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암시장에 유통되는 분유 수입근절대책도 근본적으로 파헤치지 못하고 넘어왔다. 뿐만 아니라 유업체를 실제로 통제할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유가공품 제조업허가권은 보건사회부에 존치되어 있는채 낙농가단체의 농림수산부환원조치 소리만 요란했지 실제로 관계부처간 협의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농림수산부의 노력이 얼마나 강력히 제기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분유 5천톤 구매 공약은 미리 내세워 일시적인 농가여론을 잠재울 수 있었으나 수급상황이 호전되면서 정부수매정책은 후퇴하게 되고, 이에따라 유업체로부터 입은 낙농가의 불이익도 엄청났다고 본다. 생산자 단체들이 한결같이 연말에는 우유부족 사태가 초래될 것을 예고하면서 젖소도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낙농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확신을 과연 엿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축산당국자의 애로사항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업무량이나 고민이 따른다는 것은 대중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낙농이 농림수산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거나 풀어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닐바야 정부 부처간 낙농 또는 육우산업을 보는 시각이 과연 양축가들이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는지에 많은 면에서의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이 통상법으로 소위 슈퍼301조를 내세워 미국 요구에 불응시 무차비한 보복을 가할 수 있게 하거나 산농업법을 제정하면서까지 국내 농민보호에 힘

쓰는 반면 대외적인 개방압력을 강화하여 자국 농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을 주시할 때 5월중에 입법예고한 낙농진흥법 조차 관계 부처간 이견노출로 국회상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농가 스스로 돈을 내어 홍보활동, 판로개척에 앞장서겠다고 수년간 요구한 자조금제도 조차 완성되지 않고 농가요구와는 변질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젖소를 도태하고 능력위주 소로 경영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불과 반년이 못가서 유업체의 우유 빼앗기 쟁탈전이 공공연이 벌어지고 원유냉각비는 일방적으로 중단했으면서도 원유대 선납금을 수십억 원씩 풀어대는 선심을 발휘하는가하면 건조 구매비용이라는 명목까지 만들어 낙농가를 유혹하는 한편, 낙농가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유업체를 선두로 분유수입 여론을 환기시키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4. 쇠고기 수입의 확대조치

한미간 가장 첨예한 문제로 대두된 수입쇠고기 쿼타량은 우리 정부가 올해 5만8천톤에서 매듭짓고 매년 4천톤씩 증량하여 92년도까지의 수입방침을 굳혔다. 수년간 끌어온 협상이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음을 미국은 미국대로 그리고 한국은 한국대로 각기 다른 입장에서 만족하는 보도가 나돌아 개운찮은 여론이 남기는 하였으나 국내 절대량의 쇠고기 공급이 부족한 바에야 농민들도 기정사실화하여 정부를 신뢰하였다.

정부에서는 국내 쇠고기 자급도를 60%선에서는 유지시키겠다는 축산장기정책이 제시되고 있어 어차피 수입은 되더라도 국내 기반을 조속히 강화하는 후속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유명백화점의 수입쇠고기 사기판매사건의 충격으로 상대적인 한우 선호도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에 쇠고기 가격이 190만원선으로 뛰면서 정부는 3월 하순경 소값 안정대책을 제시하여 수입쇠고기 방출량을 무제한 확대하는 한편 포자육생산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입쇠고기 유통개선 계획, 계통출하확대를 위한 도축시 매매증명서 첩부제도, 그리고 큰 소(400kg) 170만원 가격대목표등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제반물가가 급등하고 한우 사육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소값을 인위적으로 170만원대로 하향조정하겠다는 발표는 농가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샀다. 즉 수입쇠고기를 무제한 방출하기 위한 명분이라는 의혹이 가시질 않았고, 미국측 개방압력을 수용하기 위해 쇠고기 수입증량 명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제기시켰다.

5만8천톤 수입계획 발표후 불과 몇개월뒤 물가차원에서 쇠고기 무제한 수입을 검토하겠다는 경제장관 발표 등을 접하면서 날이 새면 뛰는 부동산가격이나 서민 전세방값, 장바구니물가등에 대한 대책을 제쳐둔채 소값을 물가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정부가 과연 낙농육우산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낙농육우농가들이 불안한 가운데 올해 쇠고기 수입량은 결국 8만톤으로 늘려 확정되고 말았다. 11월들어 다시 쇠고기 연동가격제를 폐지하는 반면 수입포장육가격을 13.6% 인하하여 방출하겠다는 정부발표로 소 사육농가 뿐만 아니라 양돈·양계농가등이 긴장하여 가격 인하 부당성을 일제히 지적하고 나서고 있다.

올해들어 육우산업의 가장 획기적인 대책은 소값 안정대의 제시라 할것이다. 소가격의 주기적인 파동방지와 수급안정대책으로 그동안 소값 안정대사업실시를 농가들이 강력히 주장해왔던 터에 이 대책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제시된 소값의 상한가가 180만원이고 하한가는 140만원으로 되어있어 2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소값을 무시한 수입육 방출확대명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쇠고기 수입을 본격화하고 한국시장 잠식을 노린 협동산업연구원이라는 미국육류수출협회(US. MEF) 한국지부에서 9월 12일, 13일 양일간에 신라호텔과 위키힐 호텔에서 미국쇠고기 관련세미나 개최계획을 저지시킨 것도 커다란 사건이었다.

개최강행을 주장하는 주최측과 저지를 내세운 한국낙농육우협회간의 신경전이 계속되다 9월 13일 마침 주최측과 저지하는 농민간의 마찰로 세미나는 개최되지 못하였고, 이과정에서 주최측의 오만 불순한 태도와 욕설에 흥분한 농민들이 본국에서온 강사진에게 감정을 폭발시킨 사건이 미국내에 큰파장을 불러일으켜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당일 나누어진 설문조사를 토대로 종합해 볼때 미국은 한국의 기존 쇠고기 유통체제를 벗어나 미국 쇠고기 직거래 형태를 구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한국 농민들의 감정이 무디어진다고 판단되어 대대적인 언론 홍보 등을 통해 한국시장 잠식을 오래전부터 구상해 온 것 같은 인상이었다.

쇠고기 수입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개방압력이 주된 요인이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때 국내 제철기업의 수입의도 또한 더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럭키금성그룹이 호주내에 1천7백헥타르의 목장을 구입, 현지에서 소를 길러 한국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호주 경제전문지 Property지의 보도로 충격을 주었고 럭키금성그룹은 국내 수입용이 아니라 일본 수출목적이라는 변명을 하였다. 결국 하반기에 정부의 승인이 난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럭키금성그룹의 향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또 한강뚝붕괴로 수해 피해를 입은 경기도 고양군 양축농민들이 수해로 잃은 소에대한 보상을 쫓소수입으로 충당해달라는 요청이 강력히 제기되어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결국 보상대책으로 무마되긴 하였으나 홍수피해가 인제건 천재건을 따지기전에 성우 쫓소 피해기준 가격이 송아지가격에도 못미치는 100

만원으로 제시되고, 이 가격의 200%선이 보상 지원대책이라는 농가재해 보상관련 규정은 이런 기회에 현실화 되어야만 양축농민의 하소연할데 없는 억울한 소리가 재연되지 않을 것이다.

전국의 영세한 육우농가와와의 교류와 단결을 목적으로 한국낙농육우협회내에 육우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육우농가 여론청취와 정책 건의활동을 전개키로 한것도 올해의 활동으로 생각되며, 쇠고기 유통체계의 개선으로 등급제의 실무준비가 이루어지고 양질육생산체계가 확립되어 소비자가 한우 우수성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제고되도록 쇠고기 등급제의 마련작업이 진행된 것도 낮은감은 있으나 육우산업의 중요한 변화로 여겨진다.

5. 우루과이 농산물협상 대응

7월부터 본격적으로 문제시되고 대응에 부심한 우루과이 농산물협상관련 대책회의는 그 협상의 중요도만큼이나 국내의 반응도 부산했다. 연일 언론보도가 협상타결시의 농촌, 농업, 농민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각종 농업관련학회 농민단체 정부의 심포지움, 토론회, 공청회등이 잇비슷한 형태로 개최되고 대응책이 쏟아져 나왔다.

결론은 한결같이 개방시의 농촌몰락현상을 지적하면서 획기적인 농축산업 기반조성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강압적인 협상타결이 되더라도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국회에서 거부토록 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우리 낙농육우산업에 있어 UR협상시 제시할 자료미비와 제시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계기를 만들지 못하는 처지에 있어 8월21일의 유제품에 대한 수입개방 압력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한국낙농육우협회 김남용전문의 제안으로 낙농관련단체의 범연대적 UR대책위 설립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어 9월 5일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실무접촉회의를

갖고, 9월8일에는 한국낙농육우협회, 축협중앙회, 전국낙농협동조합연합회, 한국유가공협회 대표자가 모여 낙농대책특별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고, 한국낙농육우협회내에 실무반을 두어 'UR농산물 협상에 대한 낙농산업 대응방안'의 책자를 발간, 청와대, 국회 및 행정각부처등 관계요로에 제출, 건의하게 되었다. 책자의 주요내용은 낙농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UR협상에 대응하여 HSK 체제의 정비와 조정을 통해 구체적인 개방 일정 방안까지 제시하였다.

정부가 GATT에 제시한 비교역적 품목(NTC)에 낙농품과 쇠고기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우리 요구대로 관철된다는 보장이 없는 한 정부가 얼마나 수용력을 갖고 낙농육우산업에 대한 의지를 갖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모두의 단합과 자발적인 주체意識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여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중심의 공동대응노력으로 연대적 모임을 강화한 것도 특이하다.

수입과 관련, 특히 코코아 분유를 수입해다 사용하는 제과업체에 대한 수입근절대책으로 코코아분유 수입피해 구제신청을 상공부에 제기하는 동시에, 롯데제과와 해태제과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여 추후 필요시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사전 협의하에 수입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도 재벌기업의 수입시도 행위에 일대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농민이 단합하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고 본다.

6. 산학협동체제 분위기 조성

수입개방 문제등 농민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에 봉착하여 농민의 길잡이로서 함께 공동활동이 축산관련학회에서도 요구되는 사안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국낙농육우협회를 비롯한 양돈·양계협회와 한국축산학회등 11개

축산관련 학회가 자리를 같이하여 필요한 문제에 연대하여 대응키로 하고 10월23일 축산정책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정부관련요로에 제출하게 되었다. 건의문의 내용은 축산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표명과 과감한 지원정책제시요구, 축산단체의 의견수렴 요청, 유가공관련허가권의 농림수산부로 환원 요청등, 당면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이어 한국마사회 체육부 이관계획 발표가 있 후 축산단체와 11개학회와의 공동 연대 탄원서를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요로에 제출하게 되었다.

축산관련학회에 학자들이 축산업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참여하고 노력하는 산학협동체제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결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7. 정부 불신건의 속출

낙농발전을 유도할 낙농진흥법 개정안은 관계부처 간 이견노출로 연내 국회상정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법적 제도적 발전장치가 요청된다는 주장은 요란스러웠고, 집유제도개선, 원유검사제도의 개선 등 수년간 숙원과제로 논의되다 법개정안으로 다시 2년여간을 소비한 후 결국 국회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허탈감에 빠지게 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3조에 규정된 자조금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양돈·양계협회등 생산자 단체의 주장이 간곡하였으나 소비홍보·수요개발 등 농민들이 바라는 자조금 제도에서 수급안정·가격조절등 정책으로 해결될 과제까지 포함시키지는 농림수산부측과의 이견노출만 있는 채 하위법령안은 확정되지 않고 해를 넘기고 있다.

수년간 축산농민들이 요구해온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헌은 민자당 최고 대표위원과의 약속, 대통령과의 농민대화에서 긍정적인 검토 답변등이 있

었고 이의 시행만을 기대해온 터에 느닷없이 부가세를 농발기금으로 흡수하겠다는 일방적인 농림수산부장관 발표가 있었다. 전국 농어민 후계자들의 100만 서명운동이 전개되었고 축산관련단체의 잇다른 진정이 있었는가 하면 수차에 걸친 정치책임자의 공약이 있었던 터에 불쑥 터져나온 정부계획은 축산농가에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였다.

마사수익금을 축산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축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자 이번엔 한국마사회를 체육부로 이관하겠다는 10월 22일의 발표와 함께 정부조직법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정부계획이 확정되었음이 알려지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와 11개 축산관련학회가 연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이관계획의 즉각적인 백지화를 요청하고 있다.

내년부터 수입자유화되는 대두박은 관세율이 3%인데 국내 대두3사의 대두박 판매가 유지를 위한 관세율 인상건의를 농림수산부가 받아들여 축산인과는 일체의 상의조차 없이 재무부에 20~35% 관세율 인상을 요청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민의 요구나 건의는 묵살되기가 예사이면서 국산콩제배 농민을 담보로 재벌대두3사 요구에 정부가 앞장서는 처사에 양측가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미 낙농특별 대책위에서 책자발간으로 건의하였으나 코코아 분유는 제도적으로 수입자유화 되어 있어 수입제한 품목으로 조정해 줄것을 재차 관계요로에 건의하였고, 유가공품제조업 허가권의 농림수산부 환원을 위해 국회 농림수산위원을 위시한 행정 요로에 전국 낙농조합과 공동으로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추후 정책수립시.참고하겠다는 요식적인 답변도 있었으나 정치권에서는 이에 답신조차 없었다.

진정한 농민대변자가 누구인지도 의문이고, 축산농민의 도산은 곧 축산직 공무원의 도산이요, 축산관련대학 및 고등학교의 도산이라는 사실이 간과될 수 없다고 여겨진다.